

“강제동원 정부안은 헌법 위반...日 식민지배까지 부정”

오늘 국회서 긴급 토론회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대해 내놓은 해법안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불법적인 점령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을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비례)·무소속 김홍걸(비례)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공동 주관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부는 법치유린을 멈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 정부의 이른바 ‘제3차 변제안’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차 변제 방식의 해법은 국제법에 따라 대법원이 해석해 내린 판결에 반(反)하는 것이며, 판결 내용 중 하나인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점령’이라는 내용을 뒤엎는다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은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취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대법원은 일제의 불법점령과 직결된 강제동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

헌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부정은 사법 주권 스스로 포기한 것”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 아니며 과거사 청산 마지노선 무너뜨려”

므로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기업의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른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는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화해와 지정학·과거사-안보 교환구조의 재현과 그 해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이번 해법안은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맺은 ‘1965년 체제’ 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해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외교·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체결한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합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기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에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공산주의 위협에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전면에 배치하고 역사 청산을 후면에 배치한 결과였고 이후 ‘역사적 과제 해결’과 ‘안보적·경제적 국익’의 두가지 트랙으로 한일관계는 이어져왔다는 것이 남 교수의 분석이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안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유지해 온 두 트랙 대신 일본 아베 정부가 주장해 온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원 트랙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국제법 위반론’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면서 “1965년 이후 가까스로 살아있던 과거사 청산 문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어 “협정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위기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위기 증폭을 위한 것”이라면서 “고노담화 30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년이 되는 해, 그 의미를 왜곡·폐기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의 실현이 가장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인 기자 kdi@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할머니와 법률대리인 김정희(오른쪽)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영산강 물로 키운 쌀에서 발암물질 검출”

광주 환경단체 주장...식수 사용 우려 목소리도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영산강 물을 활용해 재배한 쌀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낙동강 물을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광주시가 가뭄극복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영산강 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하류 권역(3곳)과 낙동강 중·하류 권역(20곳)에서 재배한 쌀(백미, 현미)을 분석한 결과 영산강에서 재배한 쌀 샘플 1개와 낙동강에서 재배한 쌀 샘플 6개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농민에게 직접 구매했던 쌀을 부정대 이승준 교수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분석결과 영암군에서 영산강 물로 쌀을 재배한 지역 중 한 곳에서 1.57μg/k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만드는 독소 물질로 간·신경·생식

독성을 띄어 정수수 감소, 간 손상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kg 성인 기준 OEHHA(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소)와 ANSES(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의 생식독성 가이드라인에서 각각 2.25배와 4배의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 쌀을 먹게되면 하루 한국인 쌀 소비량(155.8g)을 고려할때 하루에 0.244μg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된다.

단체는 “단기간에 부작용이 나오기보다는 장기복용했을 경우 남성의 정자량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영산강의 하구둑을 개방해 수질 및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검출됐다”며 “실사 마이크로시스틴이 남아있더라도 정수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된다”고 해명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해법안’ 공식 거부

내용증명 전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정부의 해법안인 ‘제3차 변제’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피해자들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13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차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준식 할아버지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 대리인 측은 내용증명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차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도 담았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명시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리인은 또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 소멸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제시한 제3차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끓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정책들을 추진한다.

북구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창업자 50여명을 선정해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가 모두 북구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북구청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북구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9세 미취업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경제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도, 아파트·오피스텔 불법 숙박 영업 적발

전남도가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는 관광

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